정동영 "전주-김제 통합"… 김제 '공분'

"김제시민의 미래는 김제시민이 주인이 되어 결정해 나갈 것…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지역위원위 소속 정호영 도의원, 백창민,김영자 김제시의원, 이홍규,박준배 고문과 한광운 소상공인협회 회장 등은 18일 오전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7일 KBS라디오 '패트롤전북'에 출연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김제-전주통합론을 주장하면서 "김제는 이대로 가면 30년뒤는 소멸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KTX가 서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없다고 주장해 김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날 "정동영 의원의 이런 주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AI 여파 등으로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얼어붙어 시민들이, 울고 싶은데 뺨때리는 격이다, 김제 시민과 함께 분노 한다"면서 "김제시민의 미래는 김제시민이 주인이 되어 결정해 나갈 것이니 헛소리로 김제시민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김제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미래 발전 요소가 풍부한 지역으로, 약 1,000년전 신라시대부터 명명된 '김제'라는 이름을 앞으로 1,000년 이상 이어 갈 수 있는 문화적 역량과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

김제는 행정과 시민이 하나되어 새만금 우리땅 찾는데 성공하고, 지평선축제를 5년연속 대한민국대표 축제로 만들었고, 문화와 역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사적 제111호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정치인의 욕심에서 비롯한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새해 벽두부터 김제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정동영 의원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또 "완주.전주 통합 불발에서 보듯이 지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무리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교훈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 했다".

정호영 도의원은 "정치가 지역을 화합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론을, 가장 말하기 쉽고 편리한 지역통합론으로 풀어가려는 것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다"고 꼬집어 말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전주 방문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정호성 전화 · 문자, 2년간 평균 하루 3회

검찰, 정 공용 이메일 계정 발송 직후 최씨에게 '보냈습니다' 등 문자메시지 확인돼"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2년 간 2100회에 달하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검찰이 18일 밝혔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3회씩 매일 한 셈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국정 관련 자료 및 의견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년 간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전화는 895회, 문자메시지 1197회 등 통화내역은 총 2092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알렸던 문자메시지가 총 237회 확인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최씨의 태블릿PC 이메일 수신내역 일시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발송일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공용 이메일 계정에 발송한 직후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태블릿PC 저장 문건들에 대해 자신이 최씨에게 보낸 것이 맞고, 최씨 외에는 해당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전한 '유출 문건'은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17부3처17청 정부조직도 인선안, 인사자료 13건 등이다.

대통령 말씀 자료로는 11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비공개 부처별 지시사항과 공공기관장 지시내용 등 현안 보고, 부총리 보고안건 검토의견, 한반도 통일 위한 구상 등이다.

여기에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포함됐다.

외교상 기밀문건으로는 한미정상회담, 일본 총리 및 중국 주석 등과의 전화통화 자료, 국무장관 접견자료 등이다.

이 외에 대통령 업무보고서, 대통령 주중일정 계획과 일일 보고사항,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된 서유럽, 중동,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이탈리아, 멕시코 순방 관련한 다양한 일정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에는 정 전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 증거도 공개됐다.

검찰은 "조인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어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연설문이 최씨 손을 거친 후 격이 떨어지거나 조악해졌음을 나타낸다.

검찰은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공무상기밀누출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해보려고,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최순실 의견 반영)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뭔가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길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으로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311호 법정(중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김기춘 · 조윤선 · 김영재

특검,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단골 병원의 김영재(57) 원장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재소환 없이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이후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 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자문교수가 아님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최씨에게 수면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주기적으로 주사해온 단골 의사로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했다는 의혹으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뉴시스

문재인 "집무실에 현황판 놓고 일자리 챙기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올해 대선과 관련,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소방·경찰·사회복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노동시간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 ▲ IT·인공지능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상향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인 1만6,700명을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 사회복지 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려 25만명을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부사관 확대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